

보도

#. 지난달 30일 대학정보공시사이트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10월 공시자료 15개 항목이 공시됐다. 이날 발표된 공시 항목에는 안전관리 현황, 교사학보 현황, 기숙사수용현황, 2학기 강좌 현황,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법정부담금, 학교특성화 현황, 학생 규모별 강좌수, 대학 강의 공개 실적, 장서 보유 및 도서관 예산 현황 등이 있다.

이에 우리신문은 교육여건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자료구입비 및 장서 수, 법정부담금 그리고 안전관리 현황을 두면에 걸쳐 자세히 살펴본다.

순서

대학알리미① - 전임교원

우리학교의 이번학기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은 49.3%다. 지난학기 48.9%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40% 후반에서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전임교원 책임시수 상향조정에 관한 논의는 뚜렷한 진척이 없는 상태다.

대학알리미② - 자료구입비

학생 1인당 장서수는 올해 75.2권으로, 3년째 75~76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1인당 자료구입비는 2년 전부터 큰 폭으로 줄었다. 올해 1인당 자료구입비는 2013년 1인당 자료구입비 208,000원에서 약 30% 감소한 138,700원으로 나타났다.

대학알리미③ - 법정부담금

우리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비율이 2013년부터 올해까지 감소하는 추세다. 2013년 99.9%를 기록한 법인 법정부담금 비율은 지난해 65.2%로 하락했으며 올해는 이보다 더 낮은 59.4%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법인 측은 “재정문제로 인해 직원 건강보험까지 부담하기 어려워 법정부담금 비율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대학알리미④ - 안전관리

우리학교 건물안전점검 결과와 실험·실습실 관리 현황을 중심으로 짚어봤다. 우리학교 건물중 40년 이상된 건물은 총 11곳으로, 이중 1곳은 안전점검에서 B등급, 나머지 10곳은 등급 미지정됐다. 우리학교 건물안전점검결과, 가장 하위 등급인 D·E등급에 속하는 건물은 없었지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보인다.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경쟁대학과 격차 여전 책임시수 상향 조정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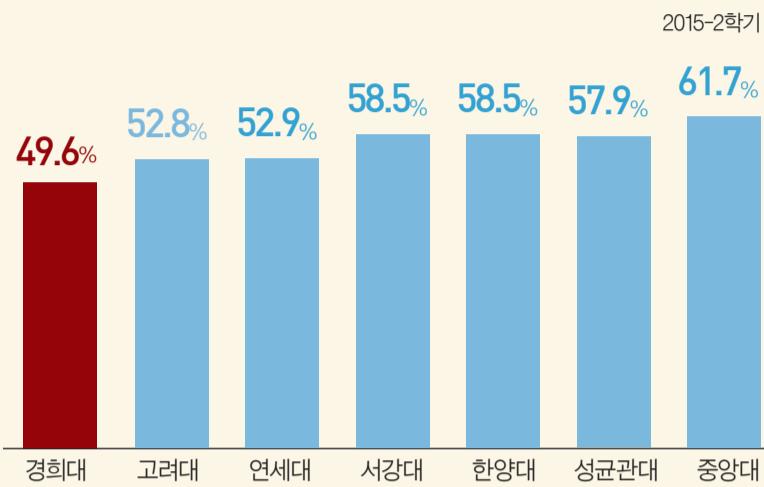
대학알리미① - 전임교원

김도엽 기자 wogmd567@kn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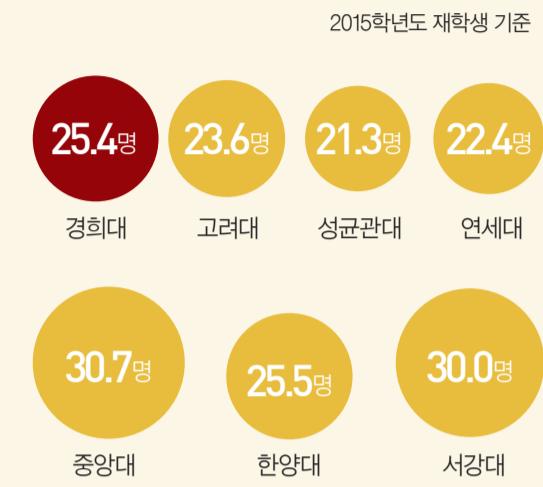
지난달 30일 공개된 대학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2015년 2학기 우리학교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이 49.3%로 사립대학 전체 평균 63.9%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체 사립학교 평균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이 지난해 62.2%에서 63.9%로 1.7%p 늘어난 것에 비해 우리학교는 0.5%p만 증가했을 뿐이다.

타 대학과의 격차는 여전했다. 주요 경쟁대학의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이 대부분 줄거나 증가 추세가 미미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학교는 간격을 좁힐만한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못했다. 강의담당비율이 낮게 나오는 이유는 책임시수와 전체 강의수와 관련이 있다. 지난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임교원 책임시수를 15시간으로 늘리겠다는 학교의 입장은 “현재 진행 중”이다. 교무과 박준 계장은 “책임 시수를 15시간으로 늘리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절차적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올해 중앙일보 대학 평가 교육여건 부분 세부 지표로 전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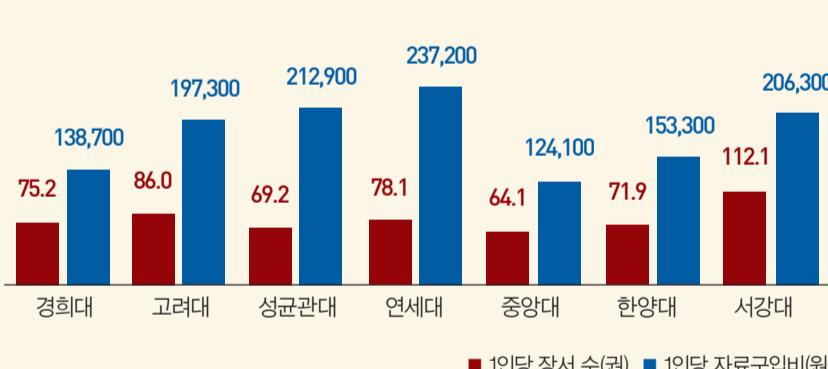


년 7,696개, 올해 7,497개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번 2학기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도 전임교원 숫자가 줄어든 상황에서 전체강의 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줄어 강의담당비율이 올라간 것으로 확인된다.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은 지난 2015 중앙일보 대학평가 순위에서도 영향을 끼쳤다. 올해 중앙일보 대학 평가 교육여건 부분 세부 지표로 전

입교원 강의담당비율이 신설됐는데, 우리학교의 순위는 40위권 밖이었다. 그 결과 교육여건 부분 순위가 지난해 18위에서 올해 23위로 하락하는데 일조하기도 했다.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부분에서는 주요 경쟁대학(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6개 대학의 평균과 비교했을 때 25.4명으로 약간 적었다. 우리학교를 제외한 6개 대학의 평균은 25.6명으로 우리학교보다 약간 높았다. 그러나 최근 3개년 변화 추이를 보면 13년 24.2명, 14년 24.7명 올해 25.4명으로 수치가 점차 나빠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재학생 수는 큰 변화가 없지만 전임교원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전임교원 확보율이 13년 81%, 14년 79.3%, 15년 77.06%로 떨어진 것과 연관이 있다. 교무과 박 계장은 “지난해 퇴직한 교수의 수만큼 신규 교수들을 충원하지 못해 올해 전임교원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6~7년 전에 비해 학생 수는 비슷하지만 전임교원 수가 400명 가까이 늘었기 때문에 이번 2%p 하락이 전임교원 확보율이 늘고 있는 추세에 크게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 2년 전 대비 30% 감소 장서수는 75~76권 수준 유지

<주요대학 1인당 자료구입비 및 장서 수 현황>



대학알리미② - 자료구입비

김도엽 기자

<우리학교 학생 1인당 장서 수>



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간 증가 장서 수는 줄어들고 있다. 연간 장서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1인당 장서 수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폐기하는 장서 수도 같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13년 장서 폐기 수는 36,719권에서 15년 21,393권으로 40% 가량 줄었다. 재학생 수가 크게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폐기하는 장서의 수가 줄어 학생 1인당 장서 수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 문제는 자료구입비 문제와 같이 장서 구입 예산이 줄어 나타난 결과다. 중앙도서관 관계자는 “75~76권의 1인당 장서 수를 지속적인 장서 구입과 기증도서 확보를 통해 유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1인당 장서 수는 75~76권 수준을 유

법정부담금 비율 59.4%로 2년째 감소 법인 측, “모두 부담하기 힘들어”

대학알리미③ - 법정부담금

김도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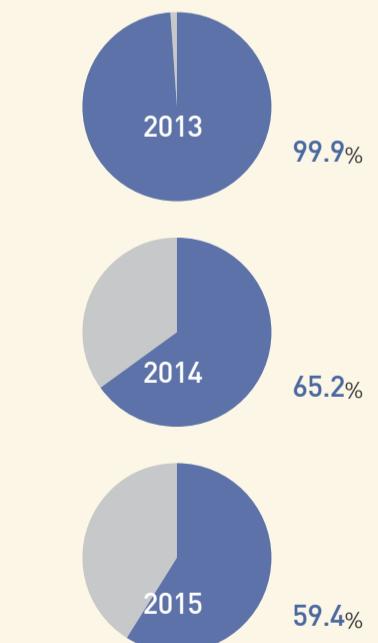
우리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비율이 대학알리미 10월 공시자료 2014년 기준 59.4%로 최근 3년 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부담금이란 교수와 학교직원을 고용한 법인이 피고용인의 사학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일부를 지금해야 하는 비용이다.

그러나 법인이 이를 부담할 수 없는 경우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제 47조 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 후 학교에서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학교 법인 경희학원은 2012년 법정부담금을 99.9% 지급했지만 13년 65.2%, 14년 59.4% 만을 지급했다. 경희학원 이해진 계장은 “사학연금은 100% 종당하고 있지만 최근 법인 재정문제로 직원 건강보험은 부담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2013년 제6차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법인은 앞으로 직원 건강보험을 제외한 사학연금에 대해서만 부담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법인 재정상황과 연결된다. 우리학교 교비회계는 13년 180억, 14년 240억, 15년 300억의 이익을 냈지만 법인회계는 14년 220억, 15년 120억의 적자를 기록해 교비에서 법정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그러나 교비로 넘겨진 법정부담금이 교비회계 중 비 등록금 회계에서 충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 등록금 회계에서 일부 부담되고 있어 문제다.

우리학교 2015 자금예산서에 따르면 법정부담금은 150억 가량으로, 이중 법인에서 부담한 90억을 제외한 60억 중 35억 원 가량이 교비회계 중 등록금회계에서 부담됐다. 지난 2014년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생회(총학)가 학교 측이 법정부담금을 등록금으로

<법인 법정부담금비율 3개년 추이>



부담하려고 해 반발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국제캠 총학은 총 법정부담금 124억 중 법인에서 부담한 79억을 제외한 45억 원을 비 등록금회계에서 충당할 것을 요구했다. 이 문제는 2014년 자금예산서를 확인한 결과, 비 등록금회계에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올해 35억 원이 등록금회계에서 지출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대학본부 관계자는 “직원 건강보험의 법정부담금이 등록금회계에서 충당이 돼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법인 또한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제 47조 2항에 따라 사학연금을 제외한 직원 건강보험 부분을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교비로 넘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